

동서고속철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나섰다

〈춘천~속초〉

도대형건설사·LH 연이어 방문
투자 의사 타진 등 선제적 대응
환경평가 자문단 등 준비 만전
“최대현안 지연 반드시 막겠다”

속초=강원도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세일즈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원도는 최근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와 외자투자 지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도건설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계획(본보 11월19일자 1·3면 보도)을 설명하고 투자 의사를 타진했다.

동서고속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선제적 세일즈를 통해 사업자를 찾기로 한 것이다. 동서고속철 역세권 개발계획은 7,58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투자자를 찾는 것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동서고속철도의 총 사업비 결정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결정을 위한 설계적정성 검토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했다. 총 사업비가 확정돼야만 입찰, 설계, 착공이 진행된다. 강원도는 지난달 26일 KDI를 방문해 연내 총 사업비 확정 및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타당(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를 통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해 동서고속철도 생태·환경 자문단을 구성했다. 환경영향평가에 자문단을 꾸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강원도의 현안이 연이어 환경협약에 발목이 걸리자 논리적인 대응전략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 것이다.

동서고속철도는 강원도 최대 현안인 만큼 환경협약으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는 생각이다.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은 “내년 초 동서고속철도의 설계와 시공, 역세권 개발이 동시다발로 이뤄지며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열기자

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 미지급 손실 보상”

민간발주자의 대금 지급 불이행 시 시공사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공제상품이 출시됐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목)은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발주자의 부도·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이번 상품 출시는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민간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가 핵심이다.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거

‘민간 공사대금 채권 공제’ 출시 조합원사 ‘손해액의 90%’ 보상 발주자와 공사비 분쟁 감소 전망

나 수급인이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에 이은 이번 공제상품 출시로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의 회사경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의 평균 미지급은 2.7건, 평균 미수령금액은 약 16억6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관련 법적 분쟁도 연간 8000건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발주자의 공사



대금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사를 보호하고, 발주자와의 공사비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상품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이달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희훈기자